

대북 교육지원 활성화와 개발지원*

신효숙(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1. 서론

남한의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뛰어든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대북 지원의 규모와 내용 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초기 긴급지원의 형태로 식량, 건강, 보건, 농업 등에 중점이 주어졌으나, 최근에는 지원분야가 확장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이다. 그동안 북한 어린이들의 정상적 성장 발육과 관련된 긴급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 북한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여건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나 지원책은 미비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다양한 민간단체, 교육기관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수준에서 북한에 교육물자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이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북한은 사회영역 가운데 특히 교육을 11년제 무상 의무교육으로 자랑해왔으나 1990년대 들어 ‘학교 붕괴’라 일컬을 정도로 열악한 교육환경과 학교교육의 질 저하를 경험하였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 주민과 학생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였고 교육문제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였다. 학교 시설과 건물은 개보수 없이 그대로 방치되었고 교육기자재는 새로운 기기로 교체되지 못했다. 백년대계인 교육의 방치와 질적 저하는 장기적으로 북한교육 발전의 큰 저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 및 남북한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은 북한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교육권의 확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한 교육협력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로 부상하고 있다.

대북 교육 분야 지원이 특화되고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 지원 사업 간에 정보를 교류할 창구조차 없는 실정이다. 2001년 대북지원 민간단체 간에 정보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농업, 보건, 복지, 일반구호의 4개 분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별도의 교육 지원을 위한 분과는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¹⁾

한편 대북 교육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국제기구와 국제 NGO 및 국내 공공단체와 국내 NGO를 포괄하여 최근까지의 북한 교육지원의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다.²⁾

1) 『대북지원 10년 백서』(서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2005), 222~224쪽.
 2) 윤종혁 외, 『북한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6); 곽재석 외, 『북한 교육 발전과 국제협력』(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5). 이 연구에서는 교육지원이 절실한 북한 교육현실에 대한 분석에서 출

교육이 대북지원의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황 분석을 발전시켜 대북 교육지원이 왜 필요한지, 교육지원 활성화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 교육지원의 중장기 목표는 무엇인지, 교육 개발지원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초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북한 교육지원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교육 분야 ‘개발지원’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북한 교육지원 활성화 방안은 또 다른 주제로서 후속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교육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접근 방식

국제사회는 세계화의 가속화와 함께 심각해지고 있는 저개발국들의 주변화와 빈곤화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들어 개도국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OECD/DAC(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는 2015년까지 빈곤층을 절반수준으로 삭감시킨다는 국제개발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계은행은 1999년 개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포괄적 개발틀(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을 구축, 중점 지원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0년 9월에 개최된 제55차 유엔정상회의에서는 지구 차원의 개발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밀레니엄개발목표)를 발표하였다. 국제사

발하여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교육지원 현황, 특히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북한 교육지원의 구체적 사례분석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회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빈곤퇴치’가 주요 국제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빈곤, 질병, 환경문제 등 지구적으로 당면한 문제들 및 정치경제적 양극화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빈곤퇴치에는 ‘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1960년대에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신생독립국들이 탄생하였고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최빈국으로서 빈약한 재정으로 교육은 뒷전에 밀려났다. 이로 인해 문맹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비문해자의 수가 1970년에는 약 7억 4천만 명, 1980년에는 8억 1천만 명, 1990년에는 9억 5천만 명으로 그 절대 수치가 인구 증가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또한 초등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도 1990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3천여만 명에 달하였고, 2000년에는 1억 6,2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비문해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서는 공고한 세계 평화도, 경제 사회발전도, 적정 인구의 유지도,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비문해자 해소를 위한 범세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³⁾

이러한 국제적 공감대에 기반 하여 1990년에 개최된 만인을 위한 교육국제회의(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All)⁴⁾에서는 국제사회가 만인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을 실현할 것을 약속하였다.

3) 김상진 외, 『유네스코와 교육』(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6), 83~84쪽.

4) 유네스코(UNESCO),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최된 만인을 위한 교육국제회의는 155개국, 33개 국제기구, 125개 NGO대표 약 1,500명이 참석한 대규모 국제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모든 이를 위한 교육세계선언(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과 행동강령(Framework for Action to Meet Basic Learning Needs)이 채택되었다.

<표 1> 교육훈련 분야 증점지원국(교육 분야/ODA 총액)

순위	2002년		2003년	
	국가명	지원비율(%)	국가명	지원비율(%)
1	뉴질랜드	28.6	그리스	35.2
2	프랑스	19.5	포르투갈	34.3
3	아일랜드	19.4	오스트리아	27.3
4	포르투갈	19.3	뉴질랜드	23.8
5	오스트리아	15.0	프랑스	17.6

자료: <http://www.koica.go.kr>.

이후 이동교육 확대, 무상의무교육 기회 제공, 문맹률 감소, 교육에서의 양성 평등 달성 및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주요 과제로 삼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진 지원국들은 최근 보편적 초등교육의 의무화를 목표로 실시되는 MDG 목표 2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도국들의 교육시설 개선 또는 확충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교육정책 및 제도 개선, 문맹퇴치 및 기타 교육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만인을 위한 교육 및 MDG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2002년의 경우 OECD/DAC 회원국들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원조) 전체 지원액의 8.7%, 2003년에는 7.7%를 교육훈련 분야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⁵⁾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개도국 지원에 본격 합류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이다. 2005년 제60차 유엔 정상회의에 참석한 노무현대통령은 MDG 달성을 위해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도국과 적극적

5) <http://www.koica.go.kr/utility/sitemap/print.html>.

<표 2> KOICA 예산 중 교육훈련 비중

(단위: 백만 달러)

년도	총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협력사업 총액 (A)	1027	23	29	30	38	49	54	55	38	38	45	54	62	124	178	210
교육훈련 총액 (B)	160	1	1	3	5	7	8	9	7	8	11	8	8	25	25	34
점유(B/A) (%)	16	4	4	10	14	15	15	16	19	21	25	16	14	20	14	16

자료: <http://www.koica.go.kr>.

으로 공유할 것을 약속하였고, 2009년까지 ODA를 현 수준의 2배로 증액할 계획을 밝혔다.⁶⁾ 한국이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아왔던 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나 다른 선진국과 같이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증액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이제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걸맞은 위상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ODA 자금을 증액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지원 현황 중에서 교육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협력사업비 중 교육·훈련 분야의 지원비중은 1991~2005년간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제도(19.8%)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유상지원사업비 중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비중은 전체 지원액의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⁷⁾

6) 김혜경, “MDG에 관한 국제적 동향 및 한국의 과제,” 『밀레니엄개발목표의 달성과 한국시민단체의 역할』,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정책토론회 자료집, 2005년 12월 13일, 3쪽.

7) <http://www.koica.go.kr/utility/sitemap/print.html>.

국제사회가 개발과 빈곤 퇴치에 주력하고 있고 이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추동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지원은 학습자의 역량을 강화시켜줌과 동시에 개도국의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인식되면서, 교육지원의 문제가 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저개발국가에 대한 교육지원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권적 측면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6조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교육권을 가지며,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하고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6조 제2항에서는 교육의 목표와 관련해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⁸⁾ 교육은 한 인간이 주체로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인간의 기본권리이며, 다른 모든 인권을 행사하고 발전 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권리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인권적 기초위에서 국제사회가 여성교육을 포함한 모든 이를 위한 양질의 기초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은 북한이 1995년에 경제난과 재해난으로 공식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면서부터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의 비중은 대부

8) 임순희,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서울: 통일연구원, 2005), 3~5쪽.

< 표 3 >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분야별 대북 지원 동향

(단위: %)

분 야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식량	76.2	84.8	93.9	93.7	95.1	96.8	93.7	88.4	75.6	90.4
농업	13.1	3.7	2.8	1.6	2.0	0.9	0.7	1.7	2.4	2.3
교육	-	-	0.3	-	-	0.1	0.1	0.7	1.4	0.2
보건	10.0	10.4	1.3	4.1	2.5	1.9	3.4	8.3	15.2	5.5
물과 위생	-	1.0	1.6	0.2	-	0.1	1.8	0.7	4.8	1.2
조정·지원	0.6	0.1	0.1	0.4	0.4	0.2	0.3	0.2	0.6	0.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권태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향과 우리의 대응전략,” 『KREI 북한농업동향』, 제6권 제3호(2004), 5쪽.

분 식량과 보건의료 부분에 치중되어 있다.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분야별 대북 지원의 동향은 <표 3>과 같다.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대북 지원은 식량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의 대북 지원액 중 식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91.0%에 이른다. 식량 다음으로는 보건(5.0%), 농업(2.3%), 물과 위생(1.2%) 순이다. 유엔기구는 대북 긴급 식량 지원 이외에도 지속적인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부분에 대한 개발지원도 병행해왔으나 국제사회의 호응은 높지 않은 편이다.

최근에는 식량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보건 분야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01년부터 교육지원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 0.1%에서 출발하여 2002년 0.1%, 2003년 0.7%, 2004년 1.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2003년에 OECD/DAC 회원국 전체 지원액에서 7.7%를 교육훈련 분야에 지원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협력사업비 중에서 교육훈련 분야의

지원비중이 1991~2005년간 전체의 16%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그러나 앞으로 대북지원에서 교육 분야의 지원이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대개도국 지원사업 또는 대북지원 사업에서 보건 및 교육 분야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제시한 MDG의 8개 목표 중에서 목표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목표 4(아동 사망률 감소), 목표 8(개발을 위한 전 지구적 파트너십의 구축)이 북한의 교육지원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목표 8은 인적 자원 개발지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북한교육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구로는 유니세프와 유네스코를 들 수 있다. 유니세프는 북한의 보건과 영양공급 사업에 주력하면서 교육사업으로는 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학교 용수 및 위생 개선 지원, 초등학교의 수준 향상 지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취약 지역의 교과서와 교육물품 지원, 교과서용 종이 지원, 학교시설의 개보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⁹⁾

한편 유네스코는 EFA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교육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990년 초창기 수준으로 북한 교육환경이 복구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EFA와 관련된 국제적으로 합의된 교육 목표들의 달성에 일차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교과서용 종이 지원, 인쇄기 지원, 교육물품 지원과 같은 초등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더 나아가 북한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제도와 교육내용, 교수방법들의 쇄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컴퓨터·영어 교육, 교사훈련,

9) 광재석 외, 『북한 교육 발전과 국제협력』(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5), 121~125쪽.

직업교육,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시도하고 있다.¹⁰⁾

이렇게 볼 때, 한국 정부 및 민간단체는 ‘교육’ 분야의 지원 확대에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국제사회의 대북 교육지원 접근 방식을 고려하여 대북 교육지원의 방향, 목표와 내용들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북한교육지원은 우선 초등의무교육, 초중등교육에서 양성 격차 해소 및 양성평등 달성,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등 EFA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교육지원 목표와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대북 교육지원은 다른 개도국이나 개발도상국가와 달리 사회주의 북한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주력하고 있는 문맹퇴치나 초등의무교육이라는 목표가 사회주의 북한에서는 11년제 무상의무교육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과 내용의 개선, 학교 개보수 사업, 교원 훈련 제도, 직업훈련제도 등의 사업이 인도적 교육지원과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대북 교육지원은 인도적 지원 또는 민족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는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라는 국제사회의 지원 방향에서도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북한의 교육지원 수요

1990년대 들어 북한은 구사회주의권 국가의 붕괴 및 자연재해와 경제난·식량난으로 위기를 맞이하였다. 국가경제의 파탄은 국민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반시설을 상당히

10) 위의 책, 109~121쪽.

약화시켜놓았다. 국제기구의 북한 교육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145개 군 520만 명이 1995년 홍수 피해를 입었고 총피해액이 150억불에 달한다. 홍수기간 동안 4,120개의 유치원과 2,290개의 초·중등학교(총면적 524만 m^2)가 유실·파괴되거나 물에 잠겼고 수많은 교육비품이나 교과서가 못쓰게 되거나 유실되었다. 교과서의 경우만 살펴봐어도, 종이 3,000톤에 해당하는 346만 2,000권이 유실되거나 물에 잠겼다. 교육부문의 총피해액은 1억 4,488만 4,000달러이다. 또한 1996년에 밀어닥친 홍수로 북한은 403개의 학교(총면적 52만 7,000 km^2)가 파괴되었고 총피해액이 2억 1,373만 5,000달러에 달한다”¹¹⁾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은 1972년에 11년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중등교육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최근에 신설된 교육법에서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¹²⁾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 정도로 곳곳에 교육 기반이 와해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의 현저한 출석을 하락, 교원들에 대한 배급 중단, 교과서와 종이의 부족, 학교비품의 자체 조달 등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중등학교까지 수업료는 물론 교과서와 학용품까지 제공되던 무상의무교육은 경제사정의 악화로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수업료는 내지 않지만 교과서나 학용품은 자체 구입해야 하는

1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ational Draft EFA Assessment Report*, National EFA 2000 Assessment Group, 1999.5. p.11.

1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교육법”(1999). 모든 교육은 무료이며 학부모로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요금을 받을 수 없으며(제16조), 해당기관·기업소·단체는 학교의 교사·실험실·실습기지의 건설과 보수는 물론 교육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실험설비, 교구비품을 생산 공급하도록(제39조, 제40조) 규정하고 있다.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교의 부족한 교육시설과 교육물품을 학부모와 학생이 대신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제난 이후 학생들의 출석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국가의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북한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식량을 조달해야 했고, 생계를 위해 교원들이 결근을 하거나 학생들이 결석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1990년대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의 무상의무교육은 제도만 남아있을 뿐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는 해당기관이나 기업소로부터 학교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난방뿐만 아니라 교육기자재와 비품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경제난으로 공급이 오래 전에 중단되었다. 대부분의 많은 교육기관이 개보수 없이 방치되었으며 교육물자 부족으로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학교에서 각종 명목으로 돈을 걷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교육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은 북한교육 지원의 현실적 목표를 일차적으로는 경제난, 식량난을 겪었던 1990년대 중반 이전의 교육 수준을 회복하는 것에 두고 있다.¹³⁾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정부의 요청에 따라 초기에는 아동의 영양개선 관련 지원과 함께 교과서용 종이·학용품 등 긴급구호적 교육물자 지원에 주력하였고 최근에는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

13) “UN 전략적 틀의 일반적 목표는 북한정부가 1990년대 중반에 경제난과 인도주의적 어려움을 겪기 이전의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회복하고, 밀레니엄개발목표(MDG)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UN(2006),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7~2009, p.7.

원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1998년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에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김정일 정권은 1990년대의 위기를 해소하면서 체제 안정과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제시하였다. 강성대국이란 “주체의 사회주의 나라, 수령 중심의 정치·사상강국, 선군정치의 군사강국, 자력갱생의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 학교에서 정보통신과 컴퓨터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이 강조되고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⁴⁾

이와 같이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은 학교 환경의 개선, 교육기 자재의 현대화, 교육의 질 개선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교육성은 과학기술교육의 강화 및 교육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2005년도 교육성이 설정한 교육목표는 “우리의 교육수준을 세계 선진교육 수준으로 끌어 올리자”로서 정보화 시대에 맞게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실력 있는 인재들을 많

14) 신호숙, 『김정일 시대 북한교육의 변화』(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1998년부터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중학교 4학년 이상부터 컴퓨터 수업을 주당 2시간씩 편성하였다. 과학기술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기 위해 자연과학 분야의 수재를 양성하는 제1중학교를 각 시·군·구역별로 확대하였고, 고등교육 기관에서는 정보통신 및 컴퓨터 교육의 강화를 목적으로 김일성종합대학내 컴퓨터과학대학을 신설하는 등 IT 중심의 학부체제로 대학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유럽·아시아 등 여러 나라로 시장경제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해외연수생을 파견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법률대학이나 무역경제학과, 국제금융학과 등을 신설하고 있다.

이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제시하고 있다.¹⁵⁾ 또한 2006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교육 사업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며 “정보 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전 국가적, 전 사회적인 관심을 돌려야”함을 강조했다.¹⁶⁾

교육의 질적 개선이란 학교의 개보수 및 교육기자재·실험실습실의 구비와 같은 교육환경의 개선과 함께 일반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비롯한 최신 교육매체를 활용한 교수방법과 운영체계의 현대화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1990년대를 거치며 열악해진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2000년대 들어서는 ‘교육 현대화’ 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학교들을 선군시대 교육기관답게 꾸린다”는 방침에 따라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정부의 교육 재건에 대한 관심은 2005년 1월 26일 ‘조선교육 후원기금’¹⁷⁾의 창립으로 현실화되었다. 북한은 열악한 학교 환경과 교육 여건을 제시하면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북한 교육의 재건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원 분야로는 ① 교육조건이 불리한 교육기관들의 건물과 시설들을 보수 및 갱신, ② 교육기관들에 필요한 교구비품과 교육기자재 보장, 설비현대화에 대한 후원, ③ 교과서와 참고서 인쇄능력 제고를 위한 후원, ④ 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술기능 교육을 강화, 양성 사업에 대한 후원, ⑤ 자연재해 등 피해지역에서의 교육기관들에 대한 긴급협조와 특수교종 학교들에 대한 후원을 제시하고 있다.

15) 『노동신문』, 2005년 1월 13일, 『연합뉴스』, 2005년 1월 18일 재인용.

16) “북에 몰아치는 ‘교육혁명’ 열풍”, 『연합뉴스』, 2006년 2월 23일.

17) <http://www.koredufund.com>(2007년 6월 18일 정보검색).

조선교육후원기금의 자료 및 교육성의 최근 교육정책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북한의 교육지원 수요를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은 특히 교육 재건과 관련된 부문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북한이 지원받기를 원하는 교육부문으로는 첫째로 교육기관의 개보수 및 교육기관들에 필요한 교구비품과 교육기자재 지원, 둘째로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학교의 컴퓨터화와 강의의 다매체화 실현을 위한 기반시설의 후원, 셋째로 과학기술·컴퓨터·영어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자들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을 들 수 있다. 북한은 남측에 교육현대화와 관련된 교육기반 시설의 정비와 교육기자재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기술교육이나 컴퓨터·영어 교육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의 지원과 교류는 남측이 아닌 국제사회를 통한 지원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다.¹⁸⁾

4. 북한 교육지원의 현황과 평가

1995년 수해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국제사회 및 남한의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대북 지원에 동참하게 되었다. 초기에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식량, 비료, 생필품, 의약품 등 단순한 긴급구호품이 주로 지원되었으나 대북지원이 장기화되면서 점차 협력사업 방식의 다양한 개발구호사업으로 전환을 모색하

18) 신호숙, “북한의 고등교육 실태 및 지원 현황과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정책자료집(2006.10.31), 68쪽. <http://www.koredufund.com/news.php>(2006년 10월 20일 정보검색). 캐나다 ELIC는 2006년 8월8일부터 19일까지 북한의 대학교수들과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영어강습을 포함하여 이미 3차례의 영어강습을 실시하였다.

고 있다. 특히 1998년 정부의 대복지원 활성화 조치 이후 민간단체들은 복측과 개별창구를 확보하면서 사업 방식의 변화가 동반되었다. 국수공장, 빵공장, 콩두유 공장을 건설하여 북한이 자체적으로 식량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¹⁹⁾

2000년대 들어 민간단체들은 일반구호와 병행하여 협력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고, 이는 교육지원의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별단체들은 북한 파트너와 직접접촉이 확대되면서 북한 내 수요를 파악하여 식량뿐만 아니라 일반구호 분야에서 지원되는 품목의 다양화를 이루어 냈다. 일반구호 품목의 확대는 교육 분야 지원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초기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 분유, 빵, 두유 등 영양 개선에 중점이 두어졌다면 점차로 학용품, 스포츠용품, 장난감, 교과서용 종이, 교육기자재 등으로 지원물품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설의 개보수와 관련한 지원이 추진되면서 유아원과 유치원 등 교육시설 개보수 또는 신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원단체로는 굿네이버스, 나눔인터내셔널,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한국복지재단, 한국 JTS, 한민족복지재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2004년 용천 폭발 사건을 계기로 교사, 학생을 비롯한 전 국민의 호응하에 용천소학교를 재건하였고, 이는 북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사회의 지원정책이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협력으로 전환하고

19) 『대복지원 10년 백서』(서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대복지원민관정책협의회, 2005), 71~75쪽.

있듯이, 북한에 대한 교육 분야 지원도 차츰 긴급구호에서 개발협력 차원으로 지원의 방식을 전환해가고 있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내용이 소모성 단순물품 지원에서 교육기반시설 지원물품으로, 비계획적·일회적 지원에서 계획적·장기적인 지원으로, 물적 교류에서 인적 교류의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에서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개발지원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일찍이 교육 개발지원에 관심을 가진 이기범은 사회개발의 일부로서 교육개발지원의 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교육개발지원의 틀을 크게 다른 관련분야와 유기적인 결합 속에 지원하는 교육영역과 직접적인 교육개발지원 영역으로 구분한다. 전자에는 보건과 사회적 보장 관련 지원이 포함된다. 직접적인 교육개발지원의 영역에는 교육환경과 물질적 조건 개선, 교육내용 개선, 교육환경의 과학화와 현대화, 인적자원 능력개발, 개발사업 계획과 추진 역량 개발 사업으로 구분된다.²⁰⁾ 그의 구분은 향후 교육 개발지원의 다양한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유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기범의 교육개발지원의 틀을 기반으로 북한 교육지원의 현황과 개발지원의 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틀로서 북한 교육개발 지원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세 영역은 영양개선 사업, 교육환경 개선 사업, 교육프로그램교류 사업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영양개선사업은 교육지원의 독자적 영역이기보다는 보건, 영양 분야와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연계 프로그램(joint program)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 개발지원은 사회개발 분야 중 관련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

20) 이기범, “남북한 교육부문 협력 방안과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사례”, 『북한 교육발전과 국제협력 심포지엄』(한국교육개발원 주최, 2005.11.21), 188 ~ 189쪽.

며 특히 보건, 영양 등의 사회적 보호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추진될 때 더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즉 교육지원은 어린이·청소년들의 영양 및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므로 일반구호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교과서용 종이, 학용품, 학교비품 등 교육물자지원 사업과 교육환경의 과학화·학교의 개보수 등 교육인프라지원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 번째 교육프로그램교류 사업은 컴퓨터·외국어 교육 지원, 직업기술교육 지원과 같은 교육내용 교류와 인적자원개발 교육 등을 포함한다.

북한 교육지원의 각 영역은 시기에 따라, 비중에 따라 개별적으로 혹은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지원의 모든 영역은 북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시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사업보다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업으로 이행할 때 보다 개발지원적 요소가 가미된 협력사업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 분야 대북지원 현황을 위의 구분에 따라 <표 4>로 작성하였다.²¹⁾

북한 교육지원의 현황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부분의 단체들은 교육 분야만 전문으로 하는 지원단체라기보다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보건, 영양 등 일반 사회구호와 병행하여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원단체로 출발하지 않고 어린이 교육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남북어린이어깨동무나 교원교류를 목적으로 한 교원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원사업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21) 대북 교육지원 현황을 표로 작성할 때 OECD/DAC에서 제시한 원조목적코드(Creditor Reporting System: CRS)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의 대북 교육지원 통계가 작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은 향후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표 4> 교육분야 대복지원 현황

지원단체	지원사업 구분 및 지원내용			
	영양개선 사업 (영양 보건 분야 연계프로그램)	교육환경개선 사업		교육프로그램 교류 사업
		교육물자지원*	교육인프라 (교육환경 과학화·학교 개보수)	
굿네이버스	- 육아원에 기본생필품 및 영양식 지원	- 교과서용 종이 (서울시교육청 과 함께) - 아동용품 및 교구 - 학교개보수 물품 등 총 3,301,397\$	- 어학실습기자 재 - 평양·남포 육아원 외 7개 육아원에 대한 개보수 및 신축 사업	
경남도 교육청			- 경남도와 경남통일농업 협력회 등이 '북한학교돕기 경남교육협의 회' 구성, 교육기자재 지원 및 평양 소학교 재건축 사업 계획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 콩우유 급식 - 생필품 및 영양식 지원	- 연필공장 운영자재 - 학용품 제조 설비 및 원자재 - 보육시설 개보 수물품 등 총 684,278\$	- 학용품 공장건설 - 어린이 보육시설 개보수 등	
남북나눔 인터내셔널	- 기본생필품 및 영양식 지원	- 교과서용 종이비닐 - 이동기구 등 총 222,131\$		

동북아교육 문화협력 재단	- 함북 어린이집 10여 곳에 영양식 지원	- 교육기자재, 학용품 총 66,310\$	- 라선어린이집 건립 - 평양과학기술 대학 건립	- 평양과학기술 대학과 남북한 간 인력양성 협력프로그램 계획
대한 적십자사	기본생필품 및 영양식 지원	- 학용품 세트 - 학생용가방 등 총 361,003\$		
용천돕기운 동본부(우리 민족창구)		- 교육용 비품 - 학교비품 등 총231,544,563\$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	기본생필품 및 영양식 지원	- 교과서용 종이, 공책 - 김일성종합 대학 기숙사의 학생복지 후생용품 등		- 남북교육협력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학술·교육교류 추진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기본생필품 및 영양식 지원	- 학용품 - 교과서용 종이 총 825,143\$		- 하나프로그램 센터와 북한 전문 인력 대상 컴퓨터 교육 실시
월드비전	기본생필품 및 영양식 지원	- 책가방 9,10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기본생필품 및 영양식 지원	- 교과서용 종이 99,923\$		
유진벨	기본생필품 및 영양식 지원	- 학용품 등 437,766\$		
천주교한마 음운동본부	기본생필품 및 영양식 지원	- 가방 및 학용자재 118\$		
통일준비 네트워크		- 노트 등 22,833\$		
평화의 숲		- 공책 10,450\$		
한겨레통일 문화재단	기본생필품 및 영양식 지원	- 교과서· 공책용종이 - 인쇄기 자재 등 총 1,064,196\$		

한국 JTS	기본생필품 및 영양식 지원	- 학용품 등 14,995\$		
한민족 복지재단	기본생필품 및 영양식 지원	- 학용품 등 30,005\$		
교원단체 (한국교총, 전교조)		- 교과서용 종이 - 학용품, 교육 기자재		6·15 남북공동 수업
한국 복지재단	- 통일빵공장 설립 및 운영 - 육아원 영양개선		- 개성육아원 등 5개 육아원의 개보수 사업	
유니세프 (UNICEF)	기본생필품 및 영양식 지원	- 교과서용 종이 - 학용품, 교육 기자재	- 교육행정정보 시스템(EMIS) 지원을 위한 군교육청 컴퓨터 지원 사업 - 학교시설 개보수	- HIV/AIDS 내용을 과학교과서에 포함시킴 - 특정학교에서 학업성취연구 실시 - EMIS 지원 프로젝트
유네스코 (UNESCO)	기본생필품 및 영양식 지원	- 교과서용 종이 - 학용품, 교육 기자재		- EMIS의 설립과 훈련 - 외국어·컴퓨터·교육방법 등에서 교사 훈련과 세미나 - 직업기술교육과 훈련을 위한 교사교육과 세미나 등

* 교육물자지원 총액은 1999년 11월부터 2007년 3월 현재까지임.

출처: 『대북지원 10년백서』(2005), 『북한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2006), 『북한교육 발전과 국제협력』(2005) 및 최근 인터넷 검색자료를 분석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함.

민간단체들은 대부분 영유아, 산모, 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 위생과 급식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인도적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 영양·보건 분야와 함께 교육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양개선사업은 일회적 긴급지원의 형태가 아닌 장기적 개발지원의 보다 진전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아동급식지원 형태의 영양개선사업은 단순히 빵, 과자, 콩우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시설의 지원을 통해 공장을 건설하고 그 이후 정기적으로 원재료를 지원하는 2단계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 생산시설을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형태가 진전되고 있다.

둘째로, 교육 분야 지원사업은 개발지원의 필요성에서 불구하고 아직은 영양개선사업과 단순 교육물자지원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가 북한당국의 협조하에 실시하고 있는 영양실태 조사에서 북한아동들은 식량난으로 인해 심각한 영양실조와 성장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양 상태는 두뇌발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민간단체들은 지원 초기부터 영유아들의 성장발육을 도와주기 위해 분유, 이유식, 밀가루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빵공장, 국수공장, 두유공장 등을 통한 지속적인 영양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경제난으로 교과서와 학용품이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안하여 교과서 발행을 위한 종이와 학용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셋째로, 민간단체들은 취약계층인 영유아 아동과 관련한 시설의 개보수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최근에는 초·중등·대학의 교육시설 신축·개보수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교육시설 지원사업은 교육의 질 개선, 교육환경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는 북한당국의 교육정책과 일치하는 새로운 지원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굿네이버스와 한국복지재단은 북한의 육아원을 맡아 개·보수사업

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남도·경남도교육청·경남통일농업협력회 등이 ‘북한학교돕기경남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기자재 지원 및 평양 소학교 재건축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²²⁾ 이러한 사업방식은 지원대상이 분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원 대상 시설 및 수용 아동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전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지만 이후 적은 재원으로 지속적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교육인프라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더 적극적인 교육관련 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교육프로그램교류 사업은 극히 일부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남북한의 실질적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이 분야의 지원사업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 실질적인 교육협력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컴퓨터 인력양성, 시장경제 교육, 과학기술교육, 직업기술훈련교육 등 인력양성지원 사업이나 교육과정·교육방법의 개선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민족하나되기운동과 하나프로그램센터가 북측 전문가를 대상으로 3D관련 컴퓨터 기술교육을 실시한다거나²³⁾ 남북한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6·15남북 공동수업을 진행한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점에서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건립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 인력양성 협력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것은 향후 교육프로그램 교류 사업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다섯째로, 국내 교육지원단체와 국제기구의 교육지원사업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세 번째 교육프로그램교류 사업이 국제지원단체에서

22) “평양 소학교 건축 모금운동 확산”, 『연합뉴스』, 2007년 5월 1일.

23) “北 IT인력 단등서 남측 3D기술 강습”, 『연합뉴스』, 2007년 4월 16일.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남한 민간단체들의 교육프로그램교류 사업이 극히 제한적인데 반하여 국제기구들은 보다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HIV/AIDS 내용을 북한의 과학교과서에 포함시키거나, 특정학교에서 학업성취연구를 실시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EMIS) 지원을 시도하는 등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외국어·컴퓨터·교육방법 및 직업기술교육과 훈련을 위한 교사교육과 세미나 등의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²⁴⁾

5. 교육 분야 ‘개발지원’의 필요성

2000년대에 들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긴급구호형 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의 의제 전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1995년 이후 식량지원 중심의 단순한 소비성 대북지원의 역사가 10년을 넘기면서 국내외 기부자들 사이에 긴급구호에 대한 피로감이 만연해졌다는 점이다.²⁵⁾ 이와 함께 긴급구호의 문제점이 지적

24) 유네스코의 대북 교육지원프로그램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주목할 만한 교육협력사업으로는 2005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공공 및 대학 도서관의 정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교육이 이루어졌으며, http://portal.unesco.org/ci/en/ev.php-URL_ID=20690&URL_DO=DO_TOPIC&URLSECTION=201.html(검색일 2007.5.22) 2006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는 평양에서 교육성·직업기술학교·지방교육행정기관·연구소 관련자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http://portal.unesco.org/education/en/ev.php-URL_ID=5066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검색일 2007.5.22). 2004년까지 유니세프와 유네스코의 대북 교육지원프로그램 사업은 광재석 외, 『북한 교육 발전과 국제협력』(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5), 109~125쪽 참고.

되면서 대북지원의 목표가 북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 개혁에 보다 역점을 둔 개발지원의 형태가 되어야 함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2005년 9월 북한정부는 2006년부터 UN의 ‘인도적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고 ‘개발협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UN에 통보했고, 평양에서 활동하는 모든 국제 NGO들의 상주 외국인들이 북한을 떠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가 개발지원, 개발협력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정부도 최근 개발지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북한정부 간 개발협력에 대한 논의에서 두드러진다. 2006년 1월 평양에서는 북한정부와 UN이 공동으로 북한지원 사업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유엔기구(FAO, UNDP, UNFPA, UNICEF, WHO, WFP, UNESCO)와 북한의 주요 부처들(외무, 교육, 보건, 시관리, 외교통상, 농업, 수산업, 산림환경보호, 전기석탄공사, 재정, 국가기획위원회, 통계청) 간에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중점적인 지원협력의 분야로는 ① 경제관리, ② 지속적 에너지, ③ 환경관리, ④ 식량이용의 증대, ⑤ 기초 사회서비스의 5영역 및 세부적 지원 사업이 제시되었다.²⁵⁾ 북한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UN의 중점사업은 보건, 교육과 같은 사회서비스 영역에 보다 강조점이 주어졌다. 교육지원은 사회서비스, 사회개발의 중점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개발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는 있으나 아직

25) 윤대규, “북한 개발지원의 당위성과 추진 방향,” 『북한 개발지원의 과제와 추진 전략』(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한국국제협력단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2005.10.25), 2쪽.

26) UN(2006),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7~2009.

전문가들 사이에 개발지원, 개발협력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은 선진국에서 저소득 국가로는 물론 저소득국가 간, 개발도상국 간에도 자원과 지식의 교류가 이뤄지는 개념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개념인 개발지원(development assistance)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저소득국가로 자원과 기술이 이전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개발협력은 개발지원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최근 들어 유럽의 여러 지원국과 관련 기관들, 유엔개발계획(UNDP) 등에서는 ‘개발지원’이라는 용어보다는 ‘개발협력’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수혜국과 지원국의 관계를 보다 동등하게 접근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²⁷⁾

이렇게 볼 때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동향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는 ‘개발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지원의 현실적 성격을 반영한 ‘개발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일반적 추세가 기존의 일방적인 원조나 전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원’보다는 쌍방향적이면서 수혜국 중심의 ‘개발협력’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남북한의 지원의 성격은 인도주의적 성격이 중심이고 아직 개발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국제금융자본의 유입이나 국가 간 개발원조 프로젝트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개발협력보다 ‘개발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인다.

최근 초보적인 개발지원 형태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육

27) 임을출,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서울: 통일연구원, 2006), 4~5쪽.

분야 ‘개발지원’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교육 분야 개발지원의 필요성은 첫째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남북한 모두 교육의 기본권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국가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및 교육조건 개선·정비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남한은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헌법 제31조), 학습자의 기본적인 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2조)”²⁸⁾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또한 사회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및 새로 제정된 교육법을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11년 무상 중등의무교육제, 국가의 중등의무교육 보장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²⁹⁾ 북한은 경제난 이후 청소년들의 교육권과 관련하여 교육시설과 교육기자재 활용 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북한 청소년들의 학습기회의 보장 및 학교생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의 보수와 교육물품의 인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교육 분야 개발지원과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개발지원 전환은 북한교육의 자생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필

2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백서발간위원회, 『2004 인권백서』(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4), 388쪽.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1999)에는 국민의 중등일반교육 의무와 무료로 교육받을 권리(제12조), 11년 중등의무교육제(제13조), 부모 및 보호자의 어린이 취학 보장 의무(제14조), 외진지역 어린이와 불구어린이들에 대한 지방정권기관의 중등의무교육 보장 조치(제15조), 무료교육(제16조) 등이 명시되어 있다.

요하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초기의 급식이나 영양개선 사업, 학습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서용 종이나 학용품과 같은 단순 물품지원으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육지원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개도국에 대한 교육지원은 교육이 학습자 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발전시키도록 할 뿐 아니라 개도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는 중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 교육지원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넘어서 북한 교육의 자생력을 제고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짐에 따라, 구체적으로 교육지원이 북한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강화시키고 북한교육의 발전을 추동하는 데 기여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셋째로, 1990년대 이후 남북한 간에는 경제력 격차로 인해 야기된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등에서 상당한 교육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육지원 내용이 단순한 교육물자 지원을 포함해서 학교의 실험실습 기자재, 어학 및 컴퓨터 교육기자재, 학교 개보수와 신축 등 북한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개발지원으로 전환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개발지원은 현실적으로는 북한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의 통일비용 축소 등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로, 교육내용과 방법의 교류, 직업기술교육, 학생과 교원 교류, 외국어·컴퓨터·과학기술교육 등 인적 교류와 교육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남북한의 실질적인 교육통합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다. 교육물자 지원이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인적 교류와 교육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남북한 교육의 상호 이해 기반을 넓히고,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및 교육제도 통합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한편 개발지원에 맞추어 대북 교육지원의 목표가 새롭게 제시되어

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UN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지원은 과거에는 일방적인 지원국의 공여행위나 수원국의 수동적인 원조수혜의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적극적 개발을 위한 수원국의 참여와 상호협력이 강조되는 개발협력의 틀 속에서 바라보게 되었다.³⁰⁾ 이러한 경향은 보다 강화되어 2005년 3월에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으로 나타났다. 파리선언은 효과적인 원조사업을 위한 절차와 제도 및 리더십에 관한 수원국의 참여와 책임, 지원국들의 행동통일과 협력을 각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원조가 지원국의 시각, 이해관계, 방식, 전문가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수원국은 개발 정책, 전략 및 조화된 발전에 관하여 효과적인 리더십을 행사한다”에서처럼 수원국의 능력개발(Capacity Development)에 강조점이 주어질 것이다.³¹⁾

이렇게 볼 때, 대북 교육지원의 목표는 수원국의 능력개발에 강조점을 두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능력개발은 수원국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지원국은 단지 지원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관계는 아직도 전쟁 위협 속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남한사회 국민들 사이에는 개발지원에

30)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1990년대의 개발협력’(1989)을 발표하여 개도국의 자조노력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공평한 소득 분배, 환경보전과 지속적 개발을 위한 인구증가 역제가 개도국 지원의 핵심적 과제임을 제기하고, 1990년대의 개발협력을 위한 중점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권을 외,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 방안』(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33쪽,

31) 유성상 외, 『국제교육지원 전략보고서』(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6), 38~43쪽,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전문은 부록 183~202쪽을 참고할 것.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발전을 추동하는 개발지원은 자칫 남한에 대한 핵 위협과 침략 전쟁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위한 개발지원(development for peace)’³²⁾이라는 관점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이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과 군사력 강화로만 이어지기보다 남북한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통일사회를 준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를 지향한 개발지원의 큰 틀에서 볼 때, 대북 교육지원의 목표는 무엇일까? 대북 교육지원의 전략적 목표는 “한반도 평화달성을 위한 북한 교육의 지속가능 발전과 북한지역 청소년들의 학습역량 강화”에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 개발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포괄적 개발틀(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이라는 입장에서, 당면 현안인 식량난 해결과 빈곤의 퇴치,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맞추어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 교육지원의 목표도 빈곤 문제와 교육 문제를 해결하여 북한 교육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며, 또한 남북한의 평화 달성을 지향하며 북한지역 청소년들의 학습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북 교육지원의 단기 목표는 국제사회의 교육지원의 틀 및 북한의 교육현실과 교육적 요구에 기초하여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초교육(Basic Education)에 초점을 맞추어 ① 의무교육의 질 개선, ② 학습 환경의 개선, ③ 교육 기반시설의 정비에 두어야 할 것이다. 향후 교육 분야 개발협력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목표는 ① 정부-민간 합동사업 추진으로 교육 인프라 구축(학교의 증축

32) 이종무, “대북지원의 변천과정과 개발협력의 과제,” 『북한교육 지원 사업의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 자료(한국교육개발원, 2006.10.31), 9쪽.

<표 5> OECD/DAC의 교육 분야 분류

구분	주요 항목
교육/수준 미분류 (Education, level unspecified)	-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 교육시설 및 훈련 - 교사 훈련 - 교육 연구
기초교육 (Basic Education)	- 초등교육 - 청소년과 성인의 기본 생활교육 - 유아교육
중등교육 (Secondary Education)	- 중등교육 - 직업훈련
고등교육 (Post-secondary education)	- 고등교육 - 고급기술, 관리자 교육

출처: 장현식, “KOICA 사업과 교육분야 원조 현황,” 『국제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결과 보고서』(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6), 4~5쪽.

과 신축, 교육기반시설 정비, 정보화 등 교육현대화 사업), ②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젝트 개발, ③ 교육 분야 교류협력 프로젝트 개발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 분야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은 원조목적코드(Creditor Reporting System: CRS)에 따라 지원통계를 산출하고 분석하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OECD/DAC에서 제시한 원조목적 코드에 따라 ODA 통계를 산출하고 있는데, 대북 교육지원통계에 CRS를 적용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CRS 통계지침상 교육 분야는 크게 사회하부구조 및 서비스(Social infrastructure and service)와 교육(Education)으로 구분된다. 교육부분은 교육/수준 미분류, 기초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4개 분야로, 이는 다시 11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OECD/DAC에 가입하지 않은 관계로 통계지침상

11개 세 분류가 아닌 4개 분야로 집계하여 수출입은행이 OECD/DAC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향후 OECD/DAC 가입이 예상되므로 11개 분야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³³⁾ 북한에 대한 교육지원분류표도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국제사회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보건, 환경,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교육지원은 일차적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리고 통합에 대비한 민족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교류협력이라는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라는 국제사회의 지원 방향에서도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할 시점이다. 즉 국제사회의 지원정책과 동향을 고려하면서,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는 북한의 지속가능 발전을 겨냥한 지원 계획과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접근 방식, 북한 교육지원의 수요와 현황, 교육 분야 ‘개발지원’ 전환의 필요성, 교육 개발지원의 전략적 목표와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개발지원’ 차원의 교육지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33) 장현식, “KOICA 사업과 교육분야 원조 현황”, 『국제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결과 보고서』(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6), 4~5쪽.

첫째로 대북 교육지원 활동을 통일적으로 관장할 북한교육지원 전문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 대북 교육지원 사업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간에, 국제기구·국제 NGO와 국내 NGO 간에, 교육연구기관과 NGO 간에 원활한 정보 교류와 조정을 위한 네트워크의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다.

둘째로, 북한 교육지원의 목표, 교육지원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 분야는 아직도 지원의 목표 및 원칙이 너무 막연하게 설정되어 있다. 교육 분야는 북한이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민감한 영역이다 보니 북측의 현실적 수요를 감안한 단순 일회성 지원에 국한되거나 북측이 요구하는 방향으로만 사업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사업의 추진계획, 집행과정상 모니터링, 사후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교육 분야 개발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 단체들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대북 교육지원의 목표, 지원의 원칙과 방향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북한 교육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남북협력기금에 교육 분야의 단독 또는 합동사업을 신청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중장기 차원에서는 교육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안정적 대북 교육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가칭 ‘북한교육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로, 북한의 교육 분야 수요분석에 입각하여 대북 교육지원의 단기 및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북한 현지 수요분석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선 수요분석의 전단계로서 북한관련 연구기관에서 교육 분야 기초자료와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측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국제 NGO 및 국내 NGO의 대화 채널을 통한 조사작업과 자료분석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한사회 국민들 사이에 대북 개발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형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대외 개발원조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북 개발지원의 문제는 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2005년 조사된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을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62.3%가 긍정적 대답을, 34.2%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대외원조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개발협력보다는 개도국의 빈곤과 질병퇴치와 같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³⁴⁾ 한편 남북한은 평화체제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퍼주기 논란’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발전을 추동하는 개발지원은 자칫 남한에 대한 핵 위협과 침략 전쟁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따라서 개발지원의 필요성, 내용과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접수: 7월 5일 / ■ 채택: 8월 16일

34) 국무조정실은 공적 개발원조에 관한 국민여론조사를 2005년 8월 18일에 실시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대외원조 대상국 및 지원 분야 결정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인도주의 실천’과 ‘개도국의 빈곤퇴치’가 각각 24.6%, 39.5%로 상위를 차지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정치외교적 협력관계 증진과 관련한 지원은 모두 한 자리 숫자에 그쳤다. “우리는 ODA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구촌 ODA정책감시 뉴스레터 5호』(참여연대 2006.8.9. http://www.peoples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7498, 2007.6.30 정보검색).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백서발간위원회, 『2004 인권백서』(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4).
- 곽재석 외, 『북한 교육 발전과 국제협력』(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5).
- 권태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향과 우리의 대응전략”, 『KREI 북한농업동향』, 제6권 제3호(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권을 외,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 방안』(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김상진 외, 『유네스코와 교육』(서울: 도서출판 으뜸, 2006).
- 『대북지원 10년 백서』(서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대북지원민간정책협의회, 2005).
- 신효숙, 『김정일 시대 북한교육의 변화』(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 신효숙, “북한의 고등교육 실태 및 지원 현황과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정책자료집(2006.10.31).
- 유성상 외, 『국제교육지원 전략보고서』(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6).
- 윤대규, “북한 개발지원의 당위성과 추진 방향”, 『북한 개발지원의 과제와 추진 전략』(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한국국제협력단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2005.10.25).
- 윤종혁 외, 『북한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6).
- 이기범, “남북한 교육부문 협력 방안과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사례”, 『북한교육발전과 국제협력 심포지엄』(한국교육개발원 주최, 2005.11.21).
- 이종무, “대북지원의 변천과정과 개발협력의 과제”, 『북한교육 지원 사업의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 자료(한국교육개발원, 2006.10.31).
- 임순희,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임을출,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장현식, “KOICA 사업과 교육분야 원조 현황”, 『국제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결과 보고서』(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6).
 조명철,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실태와 남북 협력방안』(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연합뉴스』, 2005년 1월 18일.
 『연합뉴스』, 2006년 2월 23일.
 『연합뉴스』, 2007년 4월 16일, 5월 1일.
 『통일뉴스』, 2006년 3월 20일.

2. 국외 자료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ational Draft EFA Assessment Report, National EFA 2000 Assessment Group, 1999.5.
 UNICEF(2004), Report on the DPRK Nutrition Assessment 2004.
 UNICEF(2006), Unicef Plan of Action DPRK in 2007.
 E/ICEF(2006), Country programme document, DPRK.
 UN(2006),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7-2009.

http://portal.unesco.org/ci/en/ev.php-URL_ID=20690&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2007.5.22 정보검색)
http://portal.unesco.org/education/en/ev.php-URL_ID=5066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2007.5.22 정보검색)
<http://www.koica.go.kr>
<http://www.koica.go.kr/utility/sitemap/print.html>(2007.3.10 정보검색)
<http://www.tongilnews.com>
<http://www.koredufund.com>(2007.6.18 정보검색)
<http://www.koredufund.com/news.php>(2006.10.20 정보검색)
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7498(2007.6.30 정보검색)

The Revitalization of North Korean Educational Assistance and Development Assistance

Shin, Hyo-sook(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0 years have passed since North Korean NGOs started supporting humanitarian aid. Although early forms of emergence aids were mostly focused on food, health, sanitation, agriculture, recently the field of aid is widening. And then educational assistance is rising by the field of new aid.

Going through the time of suffering in 1990s, North Korea has experienced deterioration of educational circumstance and decrease in quality of school education which was thought to be almost collapse of school. Recent North Korean educational assistance is not only important in that it guarantees students' right to study, but it also develops education collaboration in preparation for North and South Korea Unification.

Therefore,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for revitalization of North Korean educational assistance.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present condition and feature of North Korean education assistance and

suggest necessity of educ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hereafter task.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ollowings: the reason why there is a need to support North Korea’s education, what theoretical basis of activation of education assistance is, what educational assistance’s long term goal is, and how education assistance’s course should be created.

Keywords: North Korean Education, Revitalization of Education Assistance, Development Assistance, Development Assistance of Educational Field